

발 간 사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회장 박 찬 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이하 의편협으로 약칭)가 출범한 지 올해로 13년째입니다. 그 동안 의편협은 학술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수준 이상의 학술지를 선별한 후 의편협이 구축한 KoreaMed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해 왔습니다. 그밖에 논문 작성법, 투고관리, 논문심사, 학술지편집, 학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화 등의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와 관련된 윤리 문제, 특히 학술지 편집인 모임인 의편협이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할 출판윤리 문제에 등한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침내 학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연이어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2005~2006년에 걸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는 낱조 또는 위조의 전형으로서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과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고위 공직자와 학자들이 연구비 관리 비리, 표절, authorship 왜곡, 중복출판/이중게재를 거리낌없이 행하여 우리나라 학술논문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고, 문화예술계에서도 학력/학위의 낱조 또는 위조가 들춰졌습니다. 의학 학술지에서도 다수의 중복출판 사례가 발견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불러 왔습니다.

Charles Babbage(1792 - 1871)가 그의 저서 『Reflections on the Decline of Science in England』에서 위조, 조작,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기 같은 사기행위가 학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연구 부정행위는 이미 19세기에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구 부정행위는 대개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납니다. Lysenko의 ‘춘화현상’(1927)과 김봉환의 ‘봉한학설’(1961), 흰쥐의 피부 조각에

검은색을 칠해 마치 아무런 면역거부반응 없이 검은쥐의 피부를 흰쥐에 이식한 것처럼 속인 William Summerlin 사건(1974), 자궁외(난관)임신 5주 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여 정상출산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Malcolm Pearce 사건(1994) 등이 연구 관련 사기행위로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공공 연구비 지원이 많지 않아 학자들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부담과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도 그만큼 적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일찍 선진화한 나라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일찍 표출된 것도 공공 연구비 지원이 우리보다 앞서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도 우리보다 10년 이상 빠릅니다. 미국은 1985년 이후 관련기구를 설치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방지법’(연구진실성위원회, 2005)을 제정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1991년 왕립의사협회가 ‘의학연구의 기만행위와 부정행위’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이 출판윤리위원회(COPE, 1997)를 구성하여 중복출판/이중게재 제재절차 마련(1997), ‘훌륭한 논문 발표 실천을 위한 지침서’ 발행(1998)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비가 팔목할 만큼 증가한 것이 1990년대 초·중반입니다. 이제라도 서둘러 연구진실성에 관한 제도와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의편협은 2006년 출판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해 7월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중복출판/이중게재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회원단체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정부 및 연구관련 공공기관도 뒤늦게 연구진실성 계도에 나섰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학술진흥재단은 2008년부터 연구단위별로 연구윤리 또는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현장과 지침을 갖추도록 하는 등 8개 항으로 된 ‘우리나라의 연구윤리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2006), 연구윤리 포럼 ‘Good Research Practice’를 개최하였습니다(2007.10). 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07.02)을 통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

윤리 확보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과학기술인의 기본 연구윤리, 연구대상 존중,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등 12개 항의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내놓았습니다(2007.04).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계획·연구수행·결과보고 과정과 연구계획서 심사나 연구 결과 심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 행위,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연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과학적 기록을 변조하거나 과학발전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중 의학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정행위는 대학 또는 연구소에 소속한 staff이 연구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범하기 쉬운 중복출판/이중게재입니다. 이는 낱조, 변조, 표절과 같은 사기행위가 아니므로 용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윤리 문제에 휘말리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연구자는 연구진실성과 연구 부정행위를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이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의 개념에서부터 위반행위의 원인과 위반에 대한 처리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 및 관련 연구 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구자와 논문 심사인, 그리고 학술지편집 관계자 모두가 늘 가까이 두고 참고해야 할 소중한 책자라고 확신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의학계 이외의 모든 과학 분야에 미칠 효과를 생각하면 분명히 의편협이 이룩한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출판윤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1년 여의 짧지 않은 기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 동안 애쓰신 함창곡 위원장님과 배종우 간사님, 그리고 기꺼이 집필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월 31일